

조직현장탐방 | 경기 구리시 어머니포순이봉사단

더불어 살아가는 구리시 만들기에 힘 보태

경기 구리시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김순임)이 각종 캠페인과 끊임없는 순찰활동을 통해 동네지킴이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리시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은 전원·환경도시로 성장한 구리시의 움직임에 발맞춰 매년 토평동 한강둔치에서 열리는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에서 미아찾기, 행사장 안내 도우미 등으로 땀흘리고 있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앞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에도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매일 아침 등교시간이면 조를 이뤄 인창동, 토평사거리에서 ‘무단횡단 방지’ ‘교통신호 준수하기’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생업과 가사에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동네는 우리가 가꾼다’는 신념으로 살기좋은 구리시 만들기에 힘

흘리고 있는 포순이들의 모습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최고의 판단기준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에 둔다’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이미지를 심기에 충분하다.

한편 지역내 소외계층 지킴이 활동 또한 남다르다. 해마다 시내 사회복지시설인 구리사회복지원과 장애 복지회관을 찾아 목욕봉사자와 유원지 나들이를 함께하며 휴지, 음료수 등 생활필수품도 전달하고 있다. “장애아동들의 빛나는 눈을 볼 때마다 남에게 기쁨을 줄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보람도 찾습니다”는 김순임 단장은 “기존 봉사활동을 지킴이 활동으로 확대해 밝고 살기좋은 구리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희혁 KFF뉴스 편집실장〉

포순이봉사단 국리민복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 밑거름 톡톡

복지회관을 찾아 목욕봉사와 유원지 나들이를 함께하며 휴지, 음료수 등 생활필수품도 전달하고



◇경기 구리시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이 지난 7월 5일 인창동 구지초등학교 앞에서 아동안전지킴이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통일광장 ⑫ 통일리더십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리더십 배양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통일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일이 하드 랜딩할지, 소프트 랜딩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고 당장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고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기와는 상관없이 통일은 한국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체제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는 한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철저한 대비와 계획만이 통일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리더십이 중요하다. 통일리더십은 통일전문역량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통일전문역량은 통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통일문제 해결에 나서는 ‘통일의 선발대’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전문역량은 통일 이후 북한에 들어가 북한 주민 및 관료들과 직접 접촉하며 북한의 재건을 이끌어야 한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통일의 난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들이다.

통일전문역량은 군대, 행정부, 학계, 사법부, 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한다. 특히 남북한 군대의 통합을 이끌 군사전문역량의 준비가 급선무이다. 통일 이후 다른 부문은 북한의 기존 인력과 시스템을 재교육하여 활용한다 해도, 군대는 완전히 해체한 후 한국군 주도로 재편성해야 한다. 군대의 경우 다른 부문

과 달리 조그만 갈등이 언제든지 폭력적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부문의 통일전문역량 구축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는다 해도 지식적인 측면은 개선이 되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다. 옳건 그르건 북한식 사고에 익숙한 북한주민들에게 우리식 사고관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실 있는 통일전문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에 기반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에 입국해 있는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 활용해야만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활용 등 현장경험 기반 시스템 구축 통일역량 구축 오랜 시간 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된 통일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북한 주민과 북한 관리들과의 접촉한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교육훈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가능하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북한 주민, 북한 당국과 관료들과 접촉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 이를 통일전문역량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일교육원의 기능을 통일교육사업을 넘어 통일전문인



◇정부는 통일전문역량 구축 확대를 위해 민간차원의 다양한 통일인재양성 사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6월 경남대학교 현장실습형 통일심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출처-경남대학교)

성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

통일전문역량 육성과 훈련시스템 구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한반도 통일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통일전문인력 양성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문제의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통일준비 노력이다.

김윤태 | 통일전략연구소장, 통일학 박사

본 기사는 <자유마당> 2018년 1월호 내용을 발췌한 것임.

력 양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거나 통일부의 직제개편도 검토해 통일교육원이 통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전문역량 구축의 확대를 위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통일인재양성을 위한 정기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각 대학의 북한 및 통일관련 학부나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통일인재양